종일돌봄·고교무상·특목고·영어금지 등 난제 산적

교육부, 닻 올린 유은혜號

사회적 합의 힘든 교육정책 직면
유치원·초등영어교육 재논의 앞둬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委로 격상
'여론 기반 오락가락 정책' 답습 우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논란 끝에 임기를 시작했지만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교육 난제들이 많아 정책 추진 과정의 극심한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유 부총리가 1년 3개월 뒤인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 교육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평등 교육을 강조한 교육혁신 방향을 드러냈다. 평등 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대비되는 교육정책 방향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 특목고가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목고에 대한 인기는 지속되는 상태라 특목고 폐지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우리 교육은 여전히 소수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교육 중심이며, 대다수 아이들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에 방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교육 불평등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TF'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 당초 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전체 130만명에 달하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한다. 당장 내년엔 6000억원이 필요해 올해 안에 국회 합의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정책 숙의를 통해 재논의할 예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위주로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영어 교육을 언제부터 해야할지 학술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는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숙의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다.

전임 김상곤 장관의 대표적인 경질 사유로 꼽히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현 중3 대상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수능 주요과목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위주 정시모집 전형 30% 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어 보수는 물론 진보 성향 여론의 비판을 받는다.

문 정부 교육공약에 포함됐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고교 학점제 시행과 내신 절대평가제 추진도 여의치 않다. 두 공약은 2025년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임기 중 이행이 어려워진 상태다.

유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를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해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숙려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정책은 국민 눈높이와 현장 수용정도와 준비상태를 고려해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일관된 교육정책을 책임감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여론에 따라 좌우되면서 정책 신뢰도 회복이 우선인 상황이 반복되면 경질된 전임 장관의 운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교육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한 논평에서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 때까지 여러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임명된 것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와 원활한 정부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현장과 국민 불만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지 이에 대한 해답부터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육정책의 의제형성과 협의과정에서 사안마다 혼란과 갈등이 표출돼 온 만큼 주요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도록 '교-정-청 협의체(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구성을 제안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세종대 인문과학대학, '0학점 인문특강' 진행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인문과학대학이 2일과 4일 이틀간 교내 집현관 503호에서 2학기 0학점 인문특강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와 국내 최연소 정한도 시의원이 진행한다.

조 대표는 여행에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정 시의원은 '일상 속의 의원'이라는 내용의 특강을 진행한다.

이날 특강은 세종대 재학생뿐 아니라 광진구민도 수강할 수 있다. 특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간식과 기념품이 선착순 제공된다. 최우수 수강생에게는 인문과학대학 학장상과 상품권을 준다. 사전 수강신청은 페이스북 페이지(세종인문)를 통해 가능하다.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원장 오은정)이 지난 1, 2일 양일간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개최한 '교양과 인성 데이'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상명대 독서·토론·문화 나누는 '교양과 인성 데이'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계당교양교육원(원장 오은정)이 지난 1, 2일 양일간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교양과 인성 데이'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교양과 인성을 기르기 위해 교양필수로 운영 중인 '교양과 인성' 교과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에서 실제 운영된 독서나 토론, 문화 및 예술 등과 관련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서울여대 6일 '제7회 레몬 정보보안 세미나' 개최

서울여자대학교는 오는 6일 서울 노원구 교내 5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제7회 레몬 정보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PI 후킹(API hooking) ▲웹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과 시큐어코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보호 인재 ▲오픈소스 백신이 가지는 의미 ▲블록체인과 보안기술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차승주, 이해은, 이지영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학생 3인과 김형종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최원혁 누리랩 대표와 신동명 엘에스웨어 연구소장 등 현장의 보안 전문가도 발표에 나선다.

이번 세미나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중급 대학서 최상급 대학으로 거듭날 것"

한성대 개교 46주년 기념식

올해 2018 자율개선대학 선정 자축
장기근속 교수·직원 등 12명에 포상

한성대학교는 지난 2일 교내 미래관 DLC(디지털 러닝 센터) 강당에서 개교 4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장기근속자 12명 포상 등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성대 개교기념일인 5일에 앞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한성학원 이종훈 이사장과 이상한 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80여 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장기근로 근속자(10년, 20년, 30년) 교수 7명과 직원 5명 등 총 12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지난 2일 열린 한성대 개교 46주년 기념식에서 이상한 총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성대

이종훈 이사장은 "한성대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음을 축하한다"며 "그동안 평가 준비에 고생한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상한 총장은 "한성대는 1972년 입학정원 150명의 작은 규모로 출발했지만, 2018년 현재 학부와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을 합한 재학생 수는 약 1만명, 교직원 수는 약 500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며 "이런 성장은 교수와 직원, 학생과 졸업생 등 한성 가족 모두의 노력과 지역사회 후원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이어 "향후 한성대가 우리나라 중급 규모대학 중에서 최상급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성대는 지난 1972년 한성여대로 출범, 1978년 한성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남녀 입학생을 받기 시작했으며, 199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됐다. /한용수 기자

교총, 교권침해 대응…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

전·현직 교원 등 47명 위원 위촉
중대 교권 사고 발생시 현장 출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2층 다산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식을 갖는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교권 관련 사고가 한국교총이나 시도교총에 접수될 경우, 중대 교권 사건으로 판단되면 현장에 출동해 초기 대응 등의 역할을 한다. 중대 교권사건 판단 기준은 ▲사회이슈화가 될 가능성 ▲학부모 및 외부 단체로부터 지속적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 ▲전체 교원의 사기 저하 가능성 ▲중대 교권 사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교육청, 경찰, 검찰, 언론 등을 상대로 기관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현장에 출동한 교권수호 SOS 위원들은 초기 피해 교원 위로와 증거 수집, 근거 자료 구성, 외부개입으로부터 피해 교원 보호, 교육청·경찰서·검찰청 등 정부기관과 연계해 대응하게 되며, 피해 교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지원 제도 방안에 대한 안내 역할도 맡는다. 또 필요시 고문변호사 등 지원시스템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의 정서적 지원은 물론 법률적 조력을 통해 조기 분쟁 해결과 피해 최소화 등 조속한 후속 조치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권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시위나 항의 등 추가적인 후속 지원업무도 하게 된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수도권·제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위원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단순 교권 사건의 경우 해당 학교와 연락을 통해 즉시 대응과 상담으로 처리된다.

교총이 교권침해 대응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은 연간 500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되는 현실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 지원을 통해 정서적 뿐만 아니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교권 관련 분쟁을 조기 해결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한용수 기자